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78
----------	------

제출연월일: 2017. 6. 30.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법령근거 없이 규제 신설된 조항 삭제 및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법령 명시, 문구 정비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 문구 정비

(안 제2조제1호, 제7조제3항, 제11조제5항)

나. 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내용은 법령근거 없이 규제 신설된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하므로 해당 조항 [제9조(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삭제

다. 분뇨수집 및 처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사업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한 근거법령 명시(안 제10조제2항)

3. 근거법규

가. 「하수도법」 제41조제4항, 제4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9

나. 「지방자치법」 제2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 2017. 5. 8. ~ 2017. 5. 29.(의견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799호

울산광역시 중구 분노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분노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액체성 또는”을 “액체성이나”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분뇨수집·운반”을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 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 --- 액체성이나 ----- ----- -----.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제7조(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①·② (생 략)	제7조(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모에 따라 다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	③ ----- ----- -----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내부 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면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과 청소를 제7조에 따른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 ④ (생략)</p> <p>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 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단, 개인하수 처리시설 내부청소 미이행의 경우 의 견제출 기간 중 청소를 이행한 <u>자</u>는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 ④ (현 행과 같음)</p> <p>⑤ ----- ----- ----- ----- -----. ----- ----- ----- ----- <u>사람은</u> -----.</p>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47조제2항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②분뇨수집·운반업자(소속 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와 같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9

[별표 9]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

1.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3.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영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신문·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스크(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碎石), 플라스틱 등 여재(濾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6.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폐쇄하는 때에는 반드시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하수도법」 제41조제4항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의안 번호	1378	<div>【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div> <div>심 사 보 고 서</div>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7. 6. 30.(금)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7. 7. 3.(월)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7. 7. 12.(수)

2. 제안설명 요지(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가. 제안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법령근거 없이 규제 신설된 조항 삭제 및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법령 명시, 문구 정비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 문구 정비
(안 제2조제1호, 제7조제3항, 제11조제5항)
- 2) 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내용은 법령근거 없이 규제 신설된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하므로 해당 조항[제9조(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삭제
- 3) 분뇨수집 및 처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사업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한 근거법령 명시
(안 제10조제2항)

다. 근거법규

- 1) 「하수도법」 제41조제4항, 제4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9
- 2) 「지방자치법」 제2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원기)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인 「하수도법」에 따른 근거법 명시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